

2007 남북정상회담

≡ 차례 ≡

1. 남한을 출발하며, 북한에 도착하며
2. 북핵문제
3. 한반도 평화체제
4. 남북 경제협력
5. 화해와 통일 문제
6.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1. 남한을 출발하며, 북한에 도착하며

□ 평화정착·경제발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에 주력

저는 오늘부터 사흘간 평양을 방문합니다.

취임 전후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한반도 정세나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열 수 있을 만큼 변화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좀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회담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논의되겠지만, 무엇보다 평화 정착과 경제 발전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는 남과 북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 협력은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남북 간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장애도 적지 않습니다.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인도적 문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의제들, 정상회담추진위원회에서 검토된 의제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의제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를 최대한 의제에 반영하고 결과를 얻고 싶은 심정이나, 한 번의 만남으로 이 많은 과제를 소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하고 성사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에서 2007. 10. 2)

□ 시기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중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사리거나 금기를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역사가 저의 책임으로 맡긴 몫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토대로 제게 맡겨진 책임만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할 것입니다. 많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신뢰를 더할 수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성과일 것입니다. 저는 잘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 남과 북이 가는 길이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북녘 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이틀 후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서울 출발 대국민 인사에서 2007. 10. 2)

□ 이 금단의 선도 차차 지워질 것

국민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날이라서 가슴이 무척 설레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선 심경이 착잡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을 갈라 놓고 있는 장벽입니다.

이 장벽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발전이 정지돼 왔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수고해서 이 선을 넘어가고 또 넘어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단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통을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군사분계선 걸어서 통과하기 전 2007. 10. 2)

□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

북녘 동포와 평양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마음속 깊이 뜨거운 감동을 느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 남녘 동포들이 보내는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남북은 지금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간절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확고할수록 그 길은 더욱 넓고 탄탄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지난날의 쓰라린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 땅에 평화의 새 역사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갑시다.

진심과 성의로써 정상회담에 임하겠습니다. 7,000만 겨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녘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뜻을 모아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평양도착 성명에서 2007. 10. 2)

2. 북핵문제

□ 6자회담 긴밀 협력, 2·13합의 성실 이행 합의

사실 저는 가면서 약간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 것이 북핵문제입니다. 북핵문제는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기본 원칙에서 이 합의가 있지만 이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는 6자회담에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잘 풀려 가고 있는데, 저더러 자꾸 북핵문제 해결하고 와라, 해결하고 와

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문제 해결의 타작마당은 따로 있는데 저더러 따로 어디서 또 타작마당 벌이라는 얘기가 되니까,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보셨듯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기존의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6자 회담의 장에서 남북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자, 쉽게 말하면 핵 폐기는 하는데 6자회담에서 우리가 같이 풀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북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 밝힌 것

김정일 위원장께서 아무 이의 없이 북핵문제에 대한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점,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될 원칙으로서 재확인한다 하는 이런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자회담에서 북측이 상당히 민감한 여러 가지 표현들에 있어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를 우리 외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협력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핵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표현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핵 폐기 과정에 대해 저는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이미 이행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시 서두에 그쪽에서 우리는 핵을 가질 의지가 없다면서 6자회담 대표(김계관)를 불러서 과정을 설명까지 해 주는 데, 핵 폐기를 확인하는 부분을 한 줄 더 넣자는 것을 가지고 옥신각신 긴 시간 논의하는 것이 회담 전략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9·19선언

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 남북정상회담이 6자회담 진전에 기여

이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북측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담 도중에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회담장에 들어오도록 해서 10월 3일의 공동성명의 합의결과를 직접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한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6자회담의 진행이 아무런 장애없이 잘 풀려갈 것으로, 따라서 핵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북핵 시비’는 대결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

오늘 여러분 중에서는 왜 북핵문제가 빠졌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핵문제가 빠져서 아쉽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북핵문제를 다루는 주된 바닥은 6자회담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 궤도에 들어서서 가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부상을 불러서 특별히 경과를 설명하는 마당이니 재삼, 재사 강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상선언에 인용된 9·19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 한반도 평화체제·동북아 다자 간 안보협력 체제, 이런 문제까지 다 들어 있는 완전성이 아주 높은 문서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자꾸 시비를 걸기 위해서 북핵문제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도 모든 공동체에는 강경과 온건, 대결주의와 타협주의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항상

이 두 세력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렇게 해 온 것이 그동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대결주의가 점차 퇴조해 가고 있다, 대세를 잃어가고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미래의 역사는 타협주의, 평화·공존의 세력이 승리할 것입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3. 한반도 평화체제

□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그 첫걸음은 대화

나는 그동안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일이면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해치는 일은 최대한 절제해 왔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상대를 존중해서 하고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의 원칙을 일관되게 말하고 이해를 구해 왔습니다.

6·15공동선언 이전까지 남과 북은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합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천이 따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의 교류협력에서 우리는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성공단, 철도와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처럼 서로 만나서 합의하고 합의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찾아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더 큰 신뢰를 쌓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의 증진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민족 공동번영의 미래를 여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이 그런 미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7,000만 겨레에게 큰

희망을 선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 면담 및 환영만찬에서 2007. 10. 2)

□ 김 위원장 평화체제 전환에 기본적 동의

이제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체제로 가려면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이 순서대로 또는 동시에 함께 가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원칙에 있어서 남북이 주도해서 직접 관련 당사국과 평화체제에 관한 협의를 열어 나가도록,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당사자 간에 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자, 각국에 이렇게 제안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과정의 일환으로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종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동북 아시아의 협력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북·미 간 그리고 북·일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듣고만 있었기 때문에, 무슨 합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걸 합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중요성을 매우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께서 매우 경청했다,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서해평화지대가 남북정상 공동선언의 핵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분쟁문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 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저는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 협력의 관점에서 이 서해 문제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해상평화공원, 그리고 해주공단 개발과 이를 개성공단·인천항과 이렇게 연결하고,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을 묶어서 포괄적으로 대결 상태를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해서 경제적 협력을 해 나가는, 이런 포괄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방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은 국방위원회 참모들과 상의한 다음에 우리 제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정상선언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NLL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갈 것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습니다. 이걸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오도하면 여간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는 것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근거해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기본입장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종전선언의 문제는 평화체제로 가는 첫 단계 문을 여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인정받으려는 부분을 국제적인 합의 속에서 끌고 가려고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련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동의 마지막에 북의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실제 선언을 언제 할 거냐는 노력을 해 가야 할 문제지만, 6자 회담의 이행 속도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고, 이 선언이 6자 회담, 북핵 폐기의 속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한국이 당사자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3자 또는 4자라는 그 문장 표현은 북쪽에서 제안한 것인데, 나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부시 대통령과 나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돼있었고,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당시까지 나와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종전선언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 연쇄적이지만 명시적으로 합의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나와 부시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중국이 명확하게 참여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것은 4자 회담, 4자 선언으로 굳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 남침 사과 않으면 평화체제로 가지 말라는 말인가

우리가 6·25를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을 종식할 때 사과와 배상 등이 패전국에게 부과되는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화해와 협력

의 전제로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일까요? 어쨌든 불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요구사항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실성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패전한 당사자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유로 남북관계를 언제나 이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정전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그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과를 받기 어렵다고 해서,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정전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자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지 못하면 평화체제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나, 그렇게 묻고 싶고, 당신은 사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4. 남북 경제협력

□ 말로만 했던 ‘남북이 하나’, 개성공단이 실천

진작부터 꼭 한 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참여정부 와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1단계의 2차, 곧 이제 다음다음,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꼭 보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함부로 국경을 넘어서 들락날락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못 왔습니다.

남북이 협력을 잘 하는 데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6자회담의 장입니다. 6자회담을 하러 가면 실제로는 북측하고 공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다,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장이 6자회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여기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남북이 하나다’라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실감이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될 건

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 10. 4)

□ 개성공단 노동자가 평화에 대한 신뢰 만드는 주인공

나는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노동자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사장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그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면 이제 정말 우리가 전쟁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전쟁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마음 속에 조금씩 조금씩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들이 북측에 투자 안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해 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 해결될 텐데, 그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평화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10. 4)

□ 경험은 일방적 지원 아닌 공동 이익

이번 회담에 임하면서 저는 경제 협력에 관해서 많은 준비를 했고 실질 회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논의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 개발 등 그동안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만스러운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경험은 어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경제협력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 중에서 대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남북경제 협력 하면 얼른 일방적

지원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는데, 회담에서 그런 방향으로 대화가 됐을 때에는 북측으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을 공동의 이익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남측도 여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은 매우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비용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데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철도 또한 기업적 투자의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자금의 지원이 좀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서 순수하게 정책자금, 말하자면 차관이라든지 또는 지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곳은 결국 개성·평양 간 도로 개선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남북 간, 무역교류 내지 투자자의 물자교류에 꼭 필요한 도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농업 협력과 보건·의료 협력에서는 아마 정책적 지원 자금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 합의가 됐을 뿐이지 구체적 합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돈 얘기를 따질 단계가 아니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 특구 방식으로 법·제도·인프라 문제 일괄해결 제안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 지역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남북 경협이 잘되지 않고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런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험의 이 많은 장애 요인들을 건건이 하나하나 해결해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절차로 인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남북 경험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토대 위에서 남북이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동 번영의 구상을 미리 준비한 바에 따라서 상세하게 밝히고, 경제협력을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남북 부총리급 공동위원회 운영 합의

이 밖에도 남북 간에 논의되어 오던 각종 경험 사업들이 정상 간 합의로서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일이 합의를 하려고 하면 너무 끝이 없고 해서, 총체적인 경제 협력에 관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남북 간 부총리급의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경험이 평화 구축하고 평화가 경험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

저는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 번영, 그리고 나아가서 동북 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단지 평화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경제, 특히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틀을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끔 북방 경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하면서도 너무 까마득해서 혹시 허황된 주장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협력 관계를 좀 속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면 북방 경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한국 경제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이 평화를 구축하고 또 평화가 경제 협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남북 경제가 상생의 경제 실현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경험 비용은 필요에 부합하는 것

지원을 하든 투자를 하든 북측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은 남쪽의 이익과 관계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철도·도로는 지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투자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성까지의 철도는 우리의 필요가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물류를 생각해서 조금만 멀리 보면 평양, 신의주까지의 철도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현재 합의된 것은 공동 이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일방적 투자나 지원이라고 말한다면 깊이 따져 보지 않은 말입니다. 공동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5. 화해와 통일 문제

□ 북 개혁·개방은 조심성 없는 말

남북 관계는 아주 급속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내가 북측에 가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개혁·개방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측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측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 개성공단을 남측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점이 있어서 매우 못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이 개혁되고 개방될 것이다 라는 말이 결과적으로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 돌아가면, 적어도 우리 정부라도 앞으로 그런 말 써서는 안 되겠다, 이곳은 남북이 하나된 자리이고 함께 성공하는 모범이 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혁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불편한 것만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현장에서 2007. 10. 4)

□ 이산가족 시급한 문제라는 데 공감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분야는 양측이 서로 제기할 사항이 많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먼저 화해의 첫 단계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산가족, 납북자, 그리고 국군 포로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도 공감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대로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시키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남북자 문제 많은 대화나눠, 다음에 문제 풀어가는 데 밑거름 됐으면

남북자 문제 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로 국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이루어 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해결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또 이런 대화의 기회를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통일문제, 실질적 접근 통해 풀어가는 것 바람직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15공동선언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진전을 이루고 남북 정상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를 예로 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동·서독과 같은 급작스러운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상호 공존·공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에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북 간 회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자주’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세공조, 민족공조의 문제가 쟁점이 됩시다마는, 저는 한국 정부가 비자주적인 정부가 아니라는 점도 설명드리고, 또 그동안 자주성의 수준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

화해한 후에 협력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화해 문제는 영원히 안 풀리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화해는 기본적으로 지난날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특성상 영원히 극복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해 없이 교류 협력하고 있는 것이 남북관계의 모순입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당·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2007. 10. 11)

6. 후속조치와 합의이행

□ 합의를 실천하는 일이 더욱 중요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남북 경협도 한반도 전체를 무대로 새롭게 발전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남북 관계 역사를 볼 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쪽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11월 중에 예정된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행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합의사항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불리할 것도 유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합의가 좋은 것이면 찬성하면 불리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고, 합의가 나쁜 것이면 반대하면 불리해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합의에 대한 태도라 할까 후보들의 전략 자체가 유리·불리를 가르는 것이지, 이 합의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불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과업 수행

저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맞추어서 어느 정부든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나간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합의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그와 같은 공동선언이 아니라, 다음 정부가 남북 관계를 더욱 잘 풀어나가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대국민 보고에서 2007. 10. 4)

□ 합의이행 위해 국민적 동의, 남북 신뢰 높이는 것이 중요

이번 정상회담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불분명한 것은 총리회담이나 후속 회담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남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일이나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다음 정부에 부담될 일은 없습니다. 단지 하기 싫은 사람에겐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부담이겠지요.

조금 전에 이행과정을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할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

니다만, 그러나 국가 전체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행이 담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의 이행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의 수준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다음 정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이후 이행을 해 가는 데 가장 큰 결정적인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높여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북쪽에게는 현실적 필요가 합의 이행의 가장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또는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신뢰를 계속 높여나가는 것, 그것이 북쪽의 이행을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북측의 이행을 촉진하는 동력은 현실적 요구, 현실적 필요입니다.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2007. 10. 19)

□ ‘퍼 주기’ 비판 이제 그만하자

저는 북한을 이제 위협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놓고 퍼 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결코 밀지는 장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밀지는 장사이면 북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보의 위협요인입니다. 그래서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통일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좀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북방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제안해 보시다, 이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

습니다. 그때도 결국 제 제안은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가슴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입니다.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에서 2007. 10. 31)